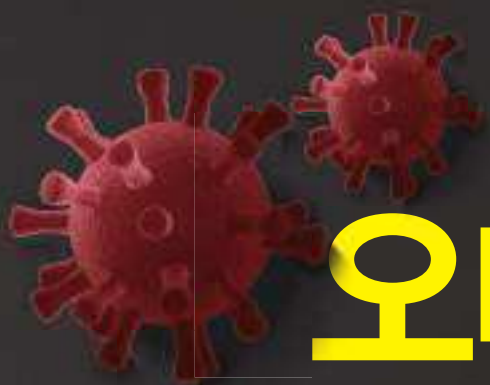




오미크론 확산 중환자·사망자 급증



이윤 시스템은 코로나바이러스 해결 못 한다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12면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8면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안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2면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6~7면

형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4~5면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5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이원웅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에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언론 〈타임〉조차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위선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 필리핀의 악명 높은 강경 우익 대통령 두테르테,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 보우소나루 등 누가 봐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자들이 회담에 참가했다.

인도가 초청받은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동맹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인도를 초청하면서 파키스탄도 초청해야 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숙적이지만 중국 편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프리트합하우스’가 매긴 ‘민주주의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37점을 받은 국가다.

중동의 경우, 친미 왕정·독재 국가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방과 가까운 이스라엘만 초청할 수도 없으니, 이라크를 초청해 구색을 맞췄다. 이스라엘은 인종 분리를 법으로 명시한 인종차별 국가이고, 이라크의 정치는 미국과 이란의 영향력 사이에서 종파 갈등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프리트합하우스가 아예 ‘자유롭지 않



바이든은 대외 정책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서방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결속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정당화하려 한다

은 나라’로 분류한 앙골라나 콩고민주공화국을 회의에 초청한 것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원재료를 포함한 그 나라들의 천연자원에 중국이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이데올로기 포장

현재 미국 내 중국·러시아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만과 우크라이나도 회의에 참가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꾸준히 악화돼 왔다.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는, 서방이 자신의 영향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에 반발한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회의에서 어떤 합의나 공동 선언이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내년에 열릴 대면 회의에서 ‘행동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이 대외 정책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고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한 미국 대중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과 소원해진 서방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결속시키는 데 민주주의의 레토릭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들이 자랑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최근 서방 선진국들 내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지배자들이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극우(와

파시스트)가 성장한 것이다. 서방 주류 언론들조차도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포할 처지냐’ 하는 볼멘소리를 하는 배경이다. 사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자체가 민주주의를 침식한다.

패권 경쟁

한편, 문재인은 이 회의에 참가해 바이든의 패권 강화 시도에 힘을 보탰다. 물론, 회의에서 중국에 관한 언급은 일절 피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한국 지배자들의 전통적인 한미동맹 중시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 한 사례일 뿐이다. 하지만 이처럼 미·중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한반도를 지정학적 불안정의 한 복판에 밀어넣는 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나름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시도를 비난한다. 미국이 실패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해 세계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신의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원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대중의 항쟁도 가차없이 짓밟았다. 신장 위구르 억압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이 더 형식적 민주주의에 가깝느냐 하는 문제, 즉 국가 형태와 정치적 지배 체제 형식 문제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전형적인 제국주의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점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미국·중국 모두 경쟁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권들을 지지할 것이고 반민주적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미국이 민주주의 수호의 이름으로 온갖 잔혹한 독재자들을 지원해 온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갈등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트로츠키의 말처럼,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재앙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요소인 노동계급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제국주의 강대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의 조직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안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2019년 체포돼 현재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1월 미국 정부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항소했고, 지난주에 영국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2월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될 수 있다. 어산지는 미국에서 18건의 간첩법 위반과 해킹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어산지는 서방 제국주의의 잔혹한 범죄를 폭로하는 수많은 문서와 외교 서한을 유출했다.



10월 23일 런던 어산지 송환 반대 시위

그중 하나는 2007년 이라크의 미군 아파치 헬기에서 찍은 영상이다. 그 영상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광장에서 〈로이터〉 기자 나미르 누르-엘딘, 운전기사 사이드 스마흐 등 여러 사람

들이 아파치 헬기에서 쏜 총탄에 사살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최초 충격 이후, 비무장 상태의 어른과 아이들 한 무리가 소형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부상자를 호송하려던 것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총탄이 쏟아졌다.

유출된 자료의 많은 부분은 당시 미군이었던 첼시 매닝이 용감하게 건넨 것이었다. 매닝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수감됐고,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9년에 1년 더 수감됐다.

2021년 1월 영국 법원은 어산지의 송환을 거부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산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자해나 자살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이에 항소했다. 그리고 영국 고등법원의 잉글랜드·웨일스법원장 버넷과 판사 홀로이드가 미국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판결에서는 어산지가 극도로 통제적인 교도소(“슈퍼맥스” ADX 교도소)에 수용될 것이고 [이미 취약해진]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인정됐다.

이번에 미국 측은 어산지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그런 처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산지가 “추가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면” 어산지를 그런 잔혹한 수감 시설에 처넣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

어산지는 최대 17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어산지의 송환 여부는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어산지의 약혼녀 스틸라 모리스는 12월 10일 고등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줄리언은 지난 2년 반 동안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010년 12월 7일 이후 11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갇혀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래야 하나요? 오늘은 국제 인권의 날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하필 오늘 이런 결정이 내려지다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산지가 끝내 송환된다면, 제국주의의 악행을 폭로하는 사람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이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되고, 혐의들은 모두 취하돼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5호 / 번역 오선희



12월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날 윤석열은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포괄하는 외연 확장을 이루겠다고 외쳤다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김승주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 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심될 정도로 우익적인 막말을 내뱉고 다니던 인물이었다.

5월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구원자”나 다름없는 인물이라며 찬양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등등.

노재승은 공인이 아닐 때 쓴 글이라며 사과도 않고 버티다가 뒤늦게 물러났다. 윤석열은 그 순간까지도 노재승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함익병도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문제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는 자였다. 이 자도 낙마했다.

윤석열은 딸의 KT 채용 비리로 유

죄 판결(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는 김성태를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앉혔었다. 결국 김성태도 사퇴했다.

토건 비리로 악명 높은 박덕흠도 윤석열 캠프의 충북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오려다 논란이 일자 40분 만에 취소됐다. 박덕흠은 건설업체를 소유한 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직을 지내면서 피감기관인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한테 77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은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였다.

부친의 편법 일감 몰아주기와 언론 매수 의혹으로 자신 탈당했던 전봉민도 기습 복당한 후 윤석열 선대위 부산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보류됐다. 전봉민은 용감한(?) 아버지 덕분에 10년 만

에 재산을 130배나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달 전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도 윤석열 캠프로 컴백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배계급 환심 사기

윤석열이 내놓는 핵심 메시지도 지배계급과 우파의 환심을 사는 데 한결 같이 맞춰져 있다.

이번 달만 해도 윤석열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대했고, 안양의 한 산재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며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호도하기도 했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 “(중소

기업주들의 고충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제도들은 모두 노동조건을 최저선을 규정하는 데서도 부족한 수준에 불과한데 말이다.

투기를 부추길 시장주의적 부동산 정책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오세훈이 추진하는 “스피드”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석열은 차별금지법 반대, 탈원전 비난, 한미동맹 강화, 전두환·노태우 등 과거 독재 정권 옹호 등 전통적 우파들의 주요 의제들을 전부 내세우고 있다.

중도 경쟁?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중도 표심을 강조해 온 김종인이 여러 논란 끝에 캠프를 이끌게 된 것을 두고,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이재명과의 중도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이재명이 좌우 줄타기를 하면서 벌이는 ‘우클릭’ 때문에 더욱 두 대선 후보가 중도층을 서로 끌어가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본다면 피상적인 분석일 것이다. 보다 근본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세력 기반에는 계급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고,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경제·안보 등의 위기가 다시 심화되면서 기업주들과 우파가 그에 대한 지지로 뭉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입당하자마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윤석열파’로 몰려 들었다. 그때 친박계가 주축 구실을 했다.

반면, 이재명의 세력 기반은 더 다계급적이다. 이재명도 기업주와 주류로 기반을 넓히고 싶어하지만, 그 자신이 친노동 시민운동 출신이기도 하고 좌파적 지식인층이나 노동조합 전현직 관료층에도 꽤 기반이 있다.

이런 기반 차이 때문에 이재명의 말과 행보가 좌우로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오락가락해도, 한국 지배계급은 그를 호락호락하게 용인해 줄 뜻이 없다. 최근엔 출신 배경에 대한 편견과 혐오까지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박근혜 퇴진 촛불로 추락했던 우파가 세력을 많이 회복했음을 곳곳에서 알 수 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우파는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그리고 변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할 것이다.

윤석열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우파의 성장세에 맞서야 한다.



투기 부추길 부동산 정책 서울시장 오세훈과 재개발 현장 둘러보는 윤석열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동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강동훈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중국 경제가 침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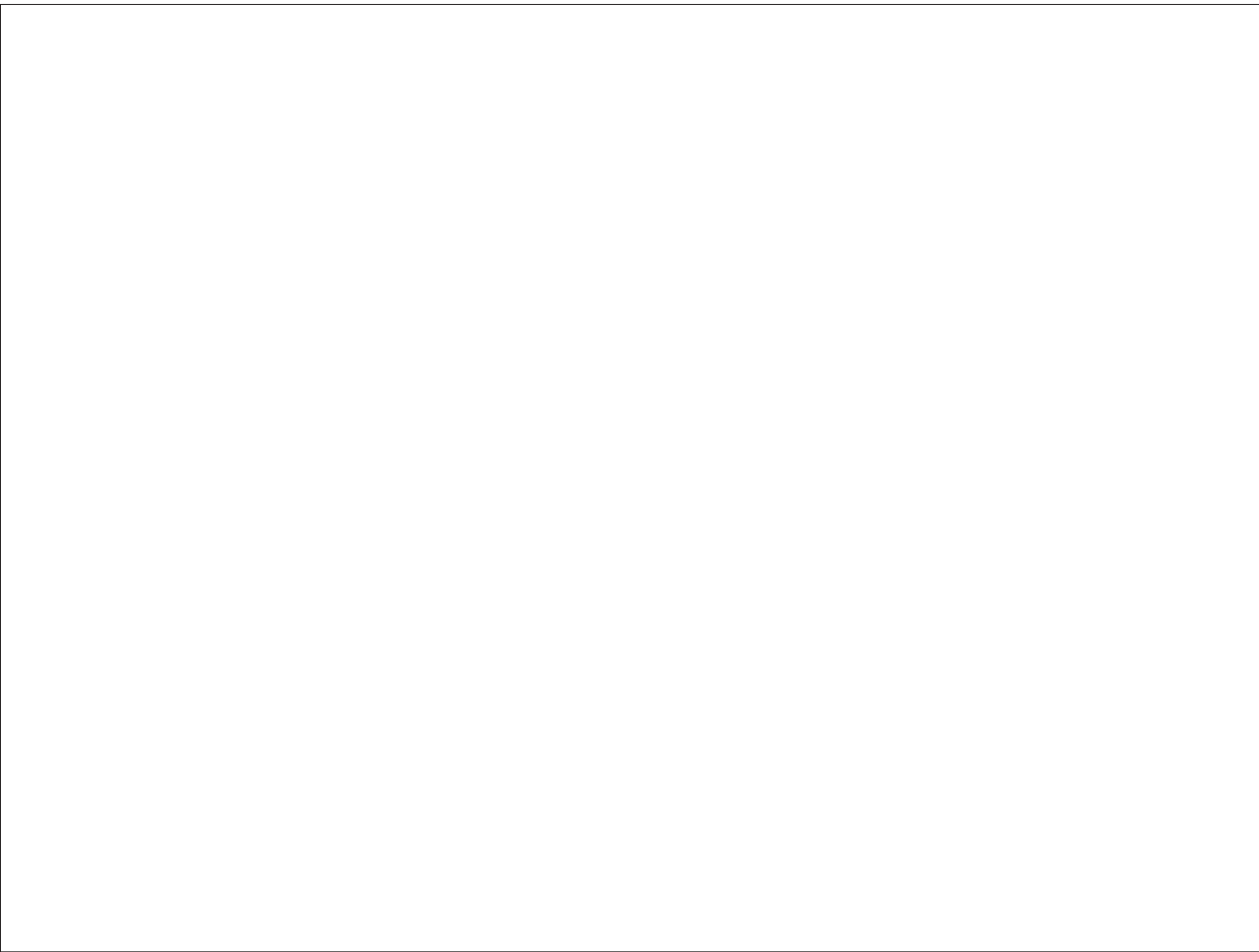
헝다 그룹이 파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올해 3분기 자금 조달 규모는 2872억 위안(약 51조 7000억 원)으로 1분기보다 약 33퍼센트나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7월 이후 중국 부동산 업체의 아파트 판매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 100대 부동산업체의 아파트 판매금액 합계는 7508억 위안(약 13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퍼센트나 쪼그라들었다. 중국 당국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헝다처럼 파산을 선포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미 수백 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형 업체이지만 대형 기업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중국 부동산업체의 파산은 계속해서 발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관련 부채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은행 대출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아 왔다. 1997년 중국 GDP의 10퍼센트가 되지 않던 부동산



먹구름 중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는 세계 경제에 암울한 징조를 드리우고 있다

부문은 2017년에는 30퍼센트 가까이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중국의 기업·가계 부채는 GDP의 220퍼센트 수준이다. 1980년대 말 일본의 거품경기 붕괴 직전의 218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가계 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도 30퍼센트로 당시 일본의 21퍼센트보다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를 보면, 중국의 금융기관 외의 민간 채무는 최근 5년 사이 매년 10퍼센트씩 증가해 35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온다. 은행의 부동산 분야 대출은 5년 사이 2.1배 늘어난 상태다.

이처럼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한 민간 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려던 중국 정부의 시도는 중국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헝다 파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 광둥성 정부는 헝다에 실무단을 파견해 ‘질서 있는 파산’으로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려 한다.

‘질서 있는 파산’

헝다 주택 분양자는 160만 명에 이르고, 헝다 관련 투자 상품 구매자가 수백만 명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헝다와 공급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빠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바로 은행과 지방 정부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지방 정부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토지를 판매해 재정을 충당해 왔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가 ‘공공부유’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런 피해를

그냥 보아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 18.3퍼센트(전년 동기 대비)까지 올랐지만, 지난 3분기에는 4.9퍼센트까지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2퍼센트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무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8퍼센트에서 내년 5.3퍼센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성장을 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들도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5개월 만에 은행 지급준비율 0.5퍼센트포인트를 낮춰서 시중에 1조 2000억 위안(약 2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12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 경제 최우선 과제는 안정 확보”라고 명시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세 조치와 인프라 투자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침체뿐 아니라 수요 위축, 공급망 혼란 등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은 또다시 중국의 기업·가계 부채 위기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헝다 파산 위기로 2008년 세계적인 금융공황이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벌어진 장기 침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내년엔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면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중국의 가계·기업 부채가 더욱 커질 공산이 높다.

중국의 성장을 둔화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퍼센트가 넘는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의 추산을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가량 떨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15퍼센트포인트 내려간다는 추산이 있다.

중국의 헝다 파산 위기는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연명해 온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보여 준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에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듯이, 앞으로 올 경기 침체 때에도 각국 지배자들은 노동자 대중이 그 손실을 감내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에 맞서 싸워야만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김문성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좌파 계열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는 11월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

지 않다가 최근에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다. 〈민중의소리〉사설은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대신 ‘인성 파탄’, ‘찍벌남’이 여전히 주요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 여기에는 진보정치의 부진도 한몫 거들고 있[다.]”

사회 변화 염원 대중에게 최근 대선 국면은 많이 답답하다. 각종 사회 개혁 의제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좌파의 지지율과 정치적 존재감도 낮다.

기업주들과 우파가 국민의힘 윤석열을 중심으로 뿔뿔 뭉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민주당 이재명은 좌우 줄타

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주와 우파를 의식한 발언이 늘고 있다. 전두환 공과 인정 발언, 부동산 시장 규제 반성 발언,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고 가능 발언 등.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좌파 후보 지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해 대선에서 좌파 대선 후보 중 역대 최대 득표(201만여 표)를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대중적 주목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민중의소리〉) 진보당은 애초 좌파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내년 초 노동당·변혁당의 합당을 전제로 구성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는 이백윤(변혁당), 이갑용(노동당), 박성철(예명 현린, 노동당) 등이 출마해 자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반향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 현 부위원장 등이 나선 민중경선 요구도 조합원 서명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각개약진하던 온건·급진좌파가 최

근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 데는 답답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장 큰 듯하다.

단일화 논의 전망

그러나 단일화 논의는 순탄치 않을 듯하다. 단일화에 대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기반, 지향에 차이가 있어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일찍이 안철수 등과의 제3지대 공조와 진보·좌파 연대의 양날개 대응을 공언해 왔다. 정의당과 안철수와의 공조 행보를 진보당이 공개 비판했지만, 정의당은 주류 양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안철수 등과의 정치(선거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풍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17만 5000명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그리고 열흘 전에는 “빠르면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할 수도 있다고 미국이 밝혔다. 12월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7개 주요 서방 경제국 외교 장관들이 모인 G7 외교장관 회의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한층의 군사적 공세는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러시아는 명심하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물론 2014년 이래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친러시아 세력이 벌이는 저강도 전쟁을 배후 지원해 왔지만 말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배치한 병력을 이용해 미국에게서 외교적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이 쟁점은 냉전이 종식되는 1990~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지막 소련 수반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인정해 줬고, 당시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약속을 깨고 나토의 동진 정책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난 9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

스 베이커는 “나토의 관할 구역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1990년대에 빌 클린턴 정부에 의해 깨졌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나란히 중부·동부 유럽의 옛 소련 위성국들을 흡수하며 영역을 넓혔다.

나토의 동진

이 정책은 냉전 종식 이후 줄곧 미국의 오만함을 상징했다. 나토 설립의 근거인 북대서양조약 5항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서로를 공격에서 지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예컨대 라트비아 같은 나라를 지키려고 정말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까? 클린턴은 기꺼이 이를 감수할 태세가 돼 있었다. 당시 보리스 옐친 하의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옐친의 뒤를 이어 1999년 집권한 푸틴은 무법 천지 같은 러시아자

본주의에 질서를 세우고, 에너지 호황에서 얻은 수입으로 군사력을 재건했다. 2008년 4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나토 정상회의를 독려해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했다. 두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 주도의 동맹이 러시아 국경까지 뻗어나가는 셈이었다. 이에 푸틴은 2008년 8월 조지아를 상대로 4일 간 가차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 전에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모두 차단했다. 하지만 푸틴이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제국주의 사이에는 더 깊은 골이 패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적 지원을 얻고 나토에 가입하고자 적극 로비하고 있다.

12월 7일 바이든은 푸틴과의 화상

회담에서 중대한 것일지도 모를 양보를 했다. 이미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배제했다. 이제 바이든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열강의 정상회의를 열어 푸틴이 요구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토를 러시아에 맞서는 방패로 여기던 우크라이나와 중부·동부 유럽 국가들에게는 달갑잖은 사태 전개다.

한 가지 문제는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러시아의 우려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북해 한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냉전에서 이긴 서방의 승리감을 표현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데올로기를 아직도 신봉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고 강력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창출해서 전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데올로기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푸틴을 “권위주의”의 잔재로 치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권위주의”라고 비난하는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제조·수출 경제국인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유럽의 유럽연합 회원국들,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푸틴의 광팬인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었고 그는 지금도 인기가 많다.

사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실패했다. 2007년에 터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말이다. 더구나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다툼이나, 독일이 아직도 러시아와의 연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 등을 보라. 서방 자본들은 오만하게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크> 2785호 / 번역 김준호

개혁 공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중의 정치의식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행보다. 오히려 정의당의 온건한 개혁주의 노선이 사회 주류를 꽤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정의당은 진보당과의 연대가 선거적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듯하다.

정의당은 좌파 정당들 중에서는 녹색당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 녹색당이 제안한 기후대선운동본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에는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미래당 등이 참여한다.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정의당은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선거인

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5 대 5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한다(<매일노동뉴스>). 반면, 한상균 후보 측은 민주노동조합원 총투표 중심의 민중 경선을 주장해 왔다. <민중의소리>는 진보당이 한상균 후보 측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다. 대중의 사기가 높고 능동적일수록 좌파 후보들도 존재감이 커지고 개혁 의제도 부각시키기 쉽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직후에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는 좌파 후보 단일화가 없었지만, (좌파계 후보 역대 최

대 득표와 함께)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주요 중도·우파 후보들이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촛불 속에서도 지지가 많았던 터라 이들이 아래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운동의 등장 가능성이 당장은 높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기후 문제 등 (대선 이후에도) 투쟁이 다시 벌어질 이유는 많다. 그래서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좌파는 개방적이고 급진적인 대중운동이 일어나도록 단결해 노력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돌파구 대중의 자신감과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좌파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고 개혁 의제도 부각시키기 쉽다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정선영

이 글은 12월 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표문이다.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위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는 여전히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상황이 조금 낫다. 미국 경제는 올해 6퍼센트 성장하며 GDP 규모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인구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350만 명이나 적다.

공급 차질과 물류대란

올해 경제가 불충분할지라도 반등하면서, 크게 가라앉았던 수요가 회복됐지만 공급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곳곳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졌다.

대표 사례가 석유다. 석유는 지난해 수요가 급감하며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심지어 서부텍사스유는 제로 달러까지) 떨어졌다. 당시 석유수출기구인 오펙 등은 생산을 대폭 줄였다. 올해 들어 석유 수요가 다시 늘고 있지만, 이들은 생산을 조금씩만 늘리고 있다.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 올해 하반기에 8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유가 인상은 뒤에서 다룰 물가 상승을 낳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같은 농축산물과 일부 채소도 석유 가격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공급 차질과 함께 세계적으로 물류대란도 벌어졌다. 지난 몇 년간 불황으로 선박 투자가 적었던 데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항만·물류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었는데 고용이 필요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정부 정책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



실질임금 갉아먹는 물가 상승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10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어, 영국은 코로나19와 함께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이주노동자가 줄면서 트럭 운전수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텅 비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주민 배척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 인지를 보여 준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적시생산 방식이 확산돼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적시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과 재고를 타이프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공급 차질 현상이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 심각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했다. 지금도 여파가 남아 있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에서 석탄 공급난이 벌어지고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며 생긴 품귀 현상이었다.

중국에서 석탄 공급난이 벌어진 것은 다른 공급 차질 문제와 비슷하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요인도 있었다. 미·중 갈등이라는 제국주의 경쟁이 그것인데, 이 맥락에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비용 절감 논리 때문에 한국에서 요소 생산 공장들이 폐쇄된 것도 공급 차질 문제를 증폭시켰다.

정부는 문제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다. 요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물가 상승

이런 공급 차질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식량 가격은 1년새 30퍼센트나 폭등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 차질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물가가 상승했다. 중국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통제하고 있지만,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3퍼센트가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약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특히 '밥상 물가', 즉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처럼 절약하기 힘든 물품의 물가가 5퍼센트나 올라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거기에 집

값도 치솟았으니, 노동자들의 실제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물가 인상은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자 최근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휘발유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지난 몇 년간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더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 임금은 불과 0.4퍼센트밖에 안 올랐다. 물가 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0.1퍼센트 떨어졌다. 9년 만에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실질임금 인상은 지난해보다는 나아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4퍼센트 올렸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인상률을 강요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실질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경제와 인플레이션 전망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된 이슈 하나는 물가 인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인플레이션이 단기 화폐 공급 문제가 아니라 자본 축적률이나 이윤율과 관련돼 있다고 본다. 지난 10여 년간 주요국 정부들이 양적완화를 하며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렸음에도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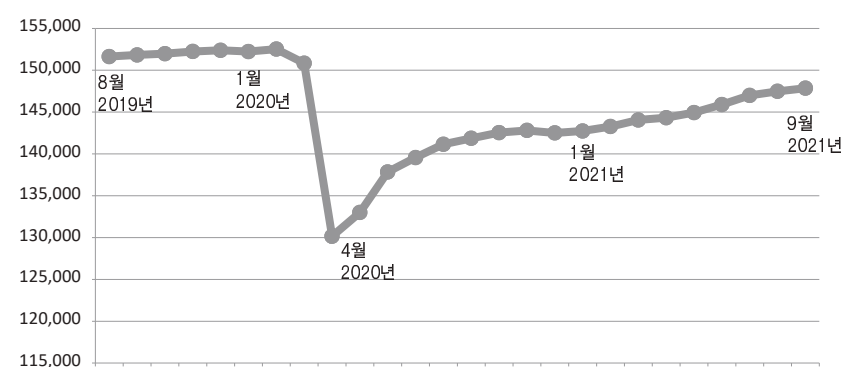
IMF는 2024년에도 세계경제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추세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10년 넘게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저성장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게다가 IMF의 이 예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낙관론을 깨뜨리고 있다. 백신 지적재산권을 고수하며 세계적 백신 불평등을 조장하더니 역풍을 맞은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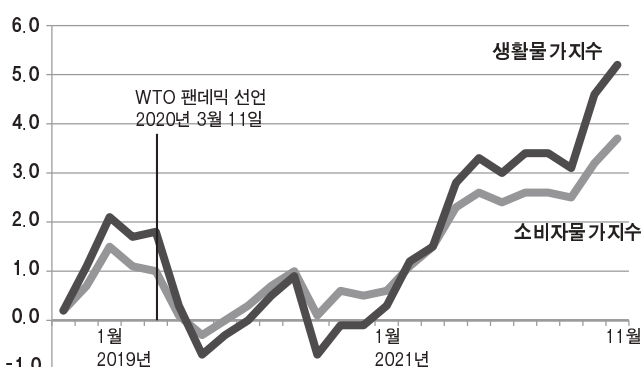
2021년 경제: 회복? 코로나19 이전 수준 못 미쳐

미국 고용인구 추이 [2020년의 저점보다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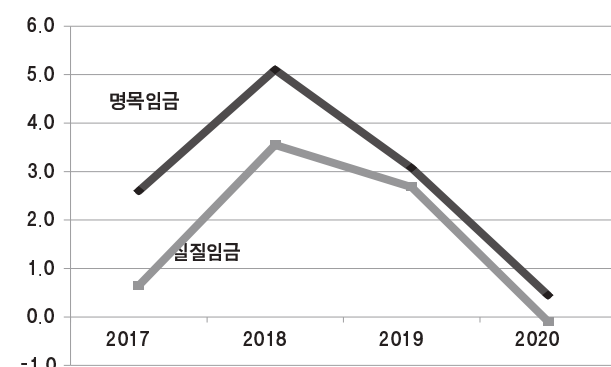
물가는 오르고

물가 동향 전년 동월 대비(%)



임금은 떨어지고

상용직노동자 임금 상승률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항공·관광·대면 서비스 등 위기 산업의 노동자 처지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

하며 세계경제 성장에 핵심 구실을 해 온 중국의 경제 성장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 2위의 부동산 기업 헝다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헝다의 부채는 알려진 것만 2조 위안, 약 365조 원에 이른다. 중국 정부가 헝다 위기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제2제3의 헝다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는 부동산 투기에 기대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는데, 이런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중국의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 하락하며 거품이 꺼질 조짐도 보인다. 향후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자본 축적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잣아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당장의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수준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망이 어둡든, 지금의 임금 인상 요구는 중요하다. 6개월 뒤에 여름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겨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배자들은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 욕구와 투쟁을 자극할까 봐 상당히 우려한다.

일리 있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택배나 화물 같은 운송, IT 기업, 보건 의료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농촌 등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줄어 일손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와 올해 택배 등 일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미국 등 각국 지배자들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공격의 일환이기도 하다.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 새로운 위기 부를 위험한 도박

실제로 미국이 물가 인상에 대응해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해 11월부터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자 브라질·러시아·헝가리·멕시코·체코·폴란드 같은 신흥

국들도 최근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올해에만 두 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가뜰이나 취약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금리 인상은 정부의 돈 풀기에 의존해 생존하는 기업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상당히 부풀어 있는 신용 거품을 터뜨릴 위험이 있다.

최근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가 마이클 로버츠는 지난해 미국의 이윤율 추계를 발표했다. 미국의 비금융부문 기업 이윤율은 2020년 한 해에만 21퍼센트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이윤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9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영업을 해도 이자도 못 버는 좀비 기업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좀비 기업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전체 기업의 40퍼센트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55퍼센트로 팬데믹 전보

다 35퍼센트나 늘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해결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황 그 자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윤율을 회복하며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망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커져 버린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낮은 금리에 의존해 생존하면서 진정한 이윤을 회복은 벌어지지 않아 왔다. 이는 지난해 침체를 거치는 동안 더욱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은 부실 기업들의 파산 위기를 키우고,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또, 신흥국들에서는 외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타격은 선진국의 금융 부실로 확대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부채 위기는 노동계급에게 직접적인 타격도 준다.

올해 2사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06조 원이다. 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자 부담은 11조 8000억 원씩 증가한다. 가구당 이자 부담이 1년에 약 150만 원씩 증가한다.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2030 청년들은 취업난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가구당 부채가 평균 7500만 원인데, 그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전세대출마저 옥죄고 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다. 급등한 전세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불황기의 투쟁과 혁명적 정치

결론을 내리자면 내년 경제는 불황 실상이 매우 크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경제는 장기 불황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는 금리 인상으로 신용 거품이 터지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파산하며 심각한 경제 후퇴가 닥칠 수도 있다.

지배자들은 그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은 거둬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하락이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 대불황이 벌어진 1930년대, 장기 호황이 불황으로 바뀐 1970년대에도 노동자들은 거대한 투쟁을 벌이고 광범한 연대를 구축했을 때 처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삼성 등은 사상 최대 이익 기록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인상되면서 올해 3분기 시중 은행들의 이자 수익도 11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위축된 처지를 만회해 보자는 노동자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 일부 부문의 구인난 같은 노동시장 조건은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노동 부문(배달이나 물류)은 자신감도 커졌다. 이런 조건을 잘 이용해 투쟁해서 성과를 거두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의 처지 방어가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업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자 측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조건과 삶을 지키려면 이윤을 우선하는 논리를 거부하고 투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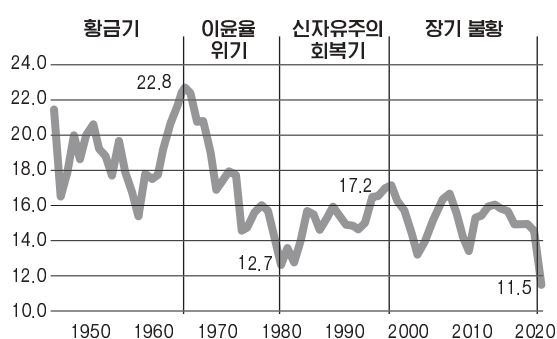
자본주의 체제 구출하기 위해 협조하는 개혁주의 정치로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일관되게 방어하기 어렵다.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조를 추진했었다. 이는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과 같은 장기 불황 시기에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는 혁명적 정치를 추구해야 노동자 조건 방어 투쟁도 일관되게 전진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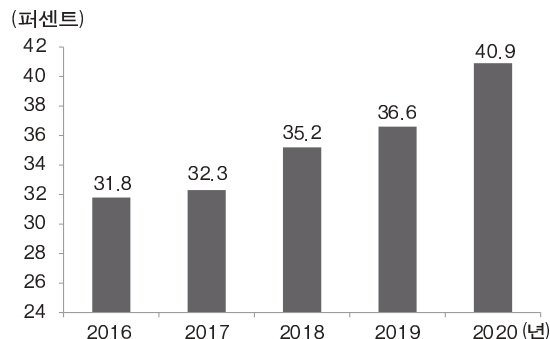
낮은 이윤율

미국의 비금융 부문 이윤율



이자도 못 버는 좀비기업 증가

한국 좀비기업 증가 운영해도 이자도 못 버는 기업



금리 인상은 노동계급에게 타격

1806조 원

한국 가계부채 총액

2030세대 가구당 부채: 7500만 원



금리 인상
1%p

가구당 1년 이자 부담 150만 원 증가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임준형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자살)을 밝히지 못한 죽음을 뜻한다. 이런 죽음은 이 것에 대해 탈북민들은 고독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16~2019년 탈북민 사망자 중 사인 미상은 연간 10명 이하로 13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탈북민은 한국 정부의 차별과 냉대로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탈북민은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를 보면, 탈북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6시간, 월 평균 임금은 216만 원이었다. 한국 전체 평균보다 8시간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52만 원 적은 것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4.4퍼센트로 한국 전체보다 6퍼센트 낮았고, 실업률은 9.4퍼센트로 3배나 높았다.

(정부 공식 통계로) 2020년 탈북민의 고용률은 2019년보다 3.8퍼센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3.1퍼센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의 고용률이 1.3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이 0.5퍼센트 증가한 것에 견줘 고용 감소 폭이 훨씬 크다.

탈북민 여성은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차질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으로 쥐꼬리만큼 늘어난 탈북민 긴급 생계지원 사업비는 2020년에 또다시 삭감됐다

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탈북민은 남한 내 친·인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다. 탈북민 여성의 61.5퍼센트가 육아 부담을 취업 장애요인 1순위 혹은 2순위로 꼽았다(〈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탈북민의 72퍼센트가 여성이다.

고령층 탈북민의 열악한 처지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증가한 것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60세 이상 탈북민의 65퍼센트가 '정부 및 사회단체(정부 보조 등)'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2020년 사회통합조사〉). 또 함께 사는 가족이 없다는 응답이 63퍼센트로, 탈북민 평균

보다 2배나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적 교류도 줄어들면서 고독사가 늘어난 듯하다. 남한 정착 기간이 길어지며 나이가 든 탈북민도 늘어 앞으로 이런 비극이 계속될 수 있다.

위선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예컨대 2019년 남북하나재단(탈북민 지원 정부기관)의 탈북민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지출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그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조차도 탈북민 규모를 고려하면 쥐꼬리만

한 것이지만 그해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으로 비판이 일자, 대상자 발굴 사업 등을 벌여 그나마 늘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해당 예산을 2억 원으로 도로 삭감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다는 정부 기관인 하나센터는 사실상 제 구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북부하나센터의 경우 직원 8명이 의정부, 포천, 남양주, 양주, 동두천 등 7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8명 중 취약계층 상담사는 1명뿐이다. 3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 중 약 30퍼센트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을 홀대한

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위선일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50퍼센트, 노무현 정부가 다시 3분의 2 수준으로 삭감한 탈북민 정착 지원금 액수를 되돌리지 않았다. 우파는 탈북민 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데올로기 선전의 도구로만 이용하려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우파 모두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조건과 복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자인 탈북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탈북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왔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입시 경쟁과 턱없이 부족한 교사 수 문제 등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례들을 보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기보다는 수능 준비와 내신 점수 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교사들

은 여러 교과 지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뒤에

는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해 왔으나, 최근에 공통과목(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은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내신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임기 초에 이를 폐기해 버리기도 했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점수 따기에 유리한 수업에 몰려, 학생 30~40명이 한 수업을 듣는 일이 흔히 벌어졌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목표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내세우지

만 실제로는 산업 수요에 맞춘 저렴한 노동력 공급을 노리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개척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부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기 직업 교육을 통한 값싼 노동력 양산 과정과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엘리트 과정으로 교육 과정이 양극화되도록 만들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 직업군을 위한 권장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신정환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이행에 몽그적대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원 385명의 모집 공고를 냈다. 전체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정도 충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술선수범"해 인력을 대폭 늘려야 마땅한데, 되레 민간 부문 수준에도 못 미친다.

분류 자동화 설비가 갖춰진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 4명당 1명, 그렇지 못한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2명당 1명의 분류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우체국들에서는 제대로 분류가 안 된 채 물건이 넘어 와 택배 노동자들이 추가로 분류 업무를 해야 하거나, 물건 인계 시간이 지연돼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도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비용마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과정 당시에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



택배 분류 비용을 요금으로 전가한 우정본부는 막심 인력 충원 합의 이행에 몽그적거리고 있다. 12월 13일 전국 8곳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

고 있는 건당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속셈인즉슨, 내년에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계속 수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분류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분류 작업에 대한 비용(노동자 1인당 수백만 원)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임금 명세서 어디에도 분류 비용이 책정돼 있지 않다

며 분통을 터트린다. 더구나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월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비용 마련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해 놓고, 노동자들에게 분류 비용을 이미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원 충원도 제대로 안 하고 요금은 인상해 우편수지(택배 포함) 적자를 만회하려 하는 듯하다.

최근 10년간 누적된 우편 적자가 7500여억 원이지만, 우체국 예금과 보험 등을 합친 전체 우정사업본부 경

영수지는 흑자다. 더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돼 동네 우체국을 줄이고, 집배원 증원 약속도 저버렸다. 또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물량 개수를 줄이고(임금 감소), 일부 물량을 집배원

에게 떠넘기는 등 노동자들 사이에 고통 분담도 강요해 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택배 서비스 평가에서 우체국 택배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시기에 열악한 조건과 감염 위험에도 택배 업무를 맡아 온 노동자들의 합의 이행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코스를 수십 가지 이상 구성해 정형화된 코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문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특정 코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코스의 과목을 수강했는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력을 교육하는 직업계고와 특목고·자사고 등의 특권학교로 차별이 벌어졌다면, 고교학점제 시행 뒤에는 일반고에서 교육 차별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교육 차별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과목을 늘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초·중등 교원 양성체계 발전방안'에서 '융합 전공'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게 되면 교사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수업 전문성 약화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에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전면 시행하려면 고교 교사가 추가로 최대 8만 8106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교원 정원은 축소하면서, 선택 과목 확대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빌미로 기간제 교·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을 늘리려

한다.

이미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기간제 교사 증가세는 줄지 않았다. 2016년 4만 6666명이던 기간제 교사 수는 2020년 4월 5만 7776명으로 4년 만에 1만 명 넘게 증가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입시 경쟁과 서열화된 대학 체계를 그대로 둔 채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흥미와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충분한 정규 교원 충원으로 수업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라고 요구하며 학생과 교사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유익한 좌파 채널

채널 바로가기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정리한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워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노동자연대TV 채널에 오시면 이런 영상 볼 수 있어요

- ★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백신패스 논란 ★ 내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실업은? ★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 기후 위기과 불평등, 노동계급 ★ 미국 vs 중국, 신냉전? ★ 트로츠키의 삶과 사상 ★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 ★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 능력주의는 청년에게 공정을 보장할까? ★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QR 코드
바로그 링크 모음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텔레그램
안드로이드 '노동자 연대 알리미'

30년 전,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토마시 텡글라-에번스

30년 전인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무너졌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걸린 붉은 깃발이 내려지고 다시는 내걸리지 못했다.

좌파 대부분은 이를 사회주의의 패배로 여겼다.

반면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 1면은 이렇게 환호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자.”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를 자처했다. 소련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노동계급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노동계급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소련과 소련의 동유럽 위성 국가들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그 후계자들은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된 잔혹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결정권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필연적 귀결은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들이 사용자, 은행가, 지주 없이도 사회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계급은 농민과 동맹을 맺고 1917년 10월에 권력을 잡았다.

혁명 러시아는 자본주의에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철저한 민주주의로 운영됐다. 그 민주주의의 기반은 노동자 평의회였다. “소비에트”는 “평의회”를 뜻하는 러시아어이다. 노동자들은 핵심 작업장을 통제했고, 지주의 대토지가 해체돼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동성애가 범죄화됐다.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온건 개혁조차 수십 년 후에도 도입된다.) 여성에게는 이혼할 권리와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혁명을 지도한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혁명 러시아가 살아남으려면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혁명은 반란 물결을 촉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 14개국이 러시아를 침공해, 옛 차르 지배 체제를 복원하려 했던 백군(白軍)의 편에서 싸웠다.

[볼셰비키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가 이끈 적군(赤軍)은 1922년에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백군을 분쇄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다. 노동계급이 섬멸되다시피 했다.

볼셰비키당은 국가 관료 기구를 떠안은 처지가 됐다. 1920년대 동안 당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됐다. 스탈린은



1991년 8월 19일, 소련 보수파들이 쿠데타에 동원한 탱크를 막으며 꽃을 들고 올라탄 시민들

당시 당의 서기장을 지냈다. 스탈린은 볼셰비키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단절해 “일국사회주의” 사상을 정식화해, 세계 혁명 없이도 그의 지도 하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말, 관료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위협과 국내의 위기가 낳은 압력 속에서 스탈린은 1928년에 제1차 5개년계획에 착수했다. 노동계급을 쥐어짜 급속한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본격적인 반혁명에 나서서 유혈낭자한 폭력으로 1917년 혁명의 성취들을 무로 되돌렸다. 5개년계획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국가자본주의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두 가지 분단선을 꼽았다.

첫째 분단선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분단선이다. 공장과 설비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결정권은 자본가들에게 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이는 단지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둘째 분단선, 즉 자본가들 사이의 분단선이 중요하다. 경쟁 때문에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윤을 다시 신기술에 투자하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서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해야 한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표현처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에 기반한 체제가 생겨난다.

소련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첫째 분단선, 즉 노동자들과 생산수단 사이의 분단선이 뚜렷이 드러났다. 스탈린주의 노동법의 핵심은 노동계급을 억속시키는 것이었다.

1929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한 결정문은 관리자의 명령이

“휘하의 행정 직원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둘째 분단선은 어떤가?

소련만 떼어 놓고 보면 둘째 분단선은 소련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 경제 안에서는 시장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을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 국가 간 세계적 경쟁 체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다르다. 소련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에 매여 있었다.

이 경쟁 때문에 관료 기구는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이 행동해야 했다. 관료들의 목표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동유럽에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이식했다. 중국·쿠바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한 다른 국가들도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했다.

제국주의 경쟁은 냉전기에 격화했다.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에 소련·동구권 통치자들은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소련 관료 집단은 1930년대에 중공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관료 집단은 이를 위해 혹독한 탄압으로 “노동 생산성”을 늘렸다(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다). 하지만 공포에 의존해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

현대 자본주의가 산업 발전의 초기 국면을 넘어서려면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탈린 사후 이런 위기는 스탈린의 하수인들 사이에서 분열을 낳았다. 그러다가 니키타 흐루쇼프가 개혁을 약속하며 권좌에 올랐다.

흐루쇼프는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스탈린을 향한 “개인

숭배”를 전면 비난했다.

흐루쇼프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공포 정치라는 “체찍”뿐 아니라 임금 인상과 소비재 증산이라는 “당근”도 약속했다. 하지만 흐루쇼프 또한 관료들의 지배가 위협받으면 언제든 탄압을 동원할 태세가 돼 있었다.

계급 투쟁

소련과 동구권은 계급 사회였고 서방과 마찬가지로 계급 투쟁이 벌어졌다.

이미 1953년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서는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

게다가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은 스탈린주의 국가들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낳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통치자들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개혁가” 흐루쇼프는 어떻게 대응했나? 탱크를 보내서 헝가리의 노동자 혁명을 분쇄했다.

소련은 1950~1960년대에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본 축적 압력을 극복하기에는 경제 내부의 발전이 부족했다.

소련의 국민 경제는 번번이 자본 축적의 발목을 잡았다. 소련의 후진성 때문에, 냉전기 군비 경쟁은 소련 경제에 특히나 무거운 부담이 됐다.

흐루쇼프의 개혁은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흐루쇼프는 1964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게 밀려났다. 하지만 브레즈네프에게 밀려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970년대에 소련은 심각한 침체에 시달렸다.

이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분열을 낳았다.

소련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에 매여 있었다. 이 경쟁 때문에 관료 기구는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이 행동해야 했다. 관료의 목표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개혁파는 국가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몇몇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보수파”는 관료들의 지배가 위협받는 다며 일체의 변화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결국 1984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통치자로 지명됐는데 이는 소련의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변신

하지만 개혁 시도는 너무 미미하고 뒤늦었다.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배자들의 분열은 더 심해졌고, 피지배층 사이에서는 관료들의 통치에 공공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989년에 혁명적 물결이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독재 정권들을 휩쓸며 무너뜨렸다.

1991년에는 소련 자신이 무너졌다. 관료 집단 내 보수적인 일부가 고르바초프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옛 소련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계급 권력을 부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정치 기구는 바뀌었지만 사용자 대 노동자의 사회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공산당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정치인들로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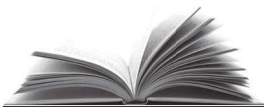
국영 기업의 관리자들은 민영화된 기업의 관리자가 되거나, 때로는 소유주가 되기도 했다.

몇몇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는 반정부 운동 세력과 신흥 자본가들도 새로운 정치 체제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신생 국가 기구들을 지배한 세력이 “개량된” 스탈린주의자들이든, 자유 민주주의자들이든, 혹은 그 둘 모두든 간에, 그 정부들은 모두 세계 자본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냉혹한 자유 시장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자들이 소련 붕괴에 슬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탈린주의가 파묻어 버린, 1917년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계급 자력 해방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5호 번역 김준호



서평 |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 21세기 생태사회주의론》 (안드레아스 말름, 마농지, 304쪽, 17,000원)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장호중

안드레아스 말름이 2020년 봄에 쓴 책이 국내에 번역 출판됐다. 말름은 2016년에 쓴 책 《화석 자본》으로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하고 기후 운동 내에서도 유명 인사가 된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는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2015~2018년 독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운동에 동참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화석 자본》에서 말름은 풍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산업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어떻게 화석연료가 당시 가장 발전한 동력원이었던 수력을 대체하게 됐는지 파헤쳤다. 이를 통해 말름은 기후 위기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틀렸고,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에게 진정한 책임이 있음을 논증했다. 이는 기후 정의 운동에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는 코로나 팬데믹이 유럽을 강타한 직후에 쓴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각각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처 방식을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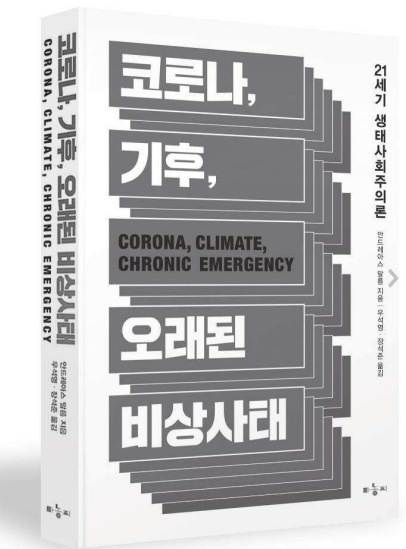
팬데믹이 본격화하던 2020년 봄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은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무릅쓰고 록다운을 강행하는가 하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했다.

이런 조치들은 기후 운동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이기도 했다.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도 대규모 재정지출과 화석연료 산업 등 일부 산업의 폐쇄가 필요하다. 그러나 팬데믹 전까지 지배자들은 이런 요구를 들은 척도 안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

말름은 기후 변화와 달리 팬데믹은 순식간에 북반구의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 자신을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배자들은 기후 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팬데믹이 2년이 지나가는 지금 보면 말름의 주장 중 일부는 다소 선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화들짝 놀라 잠시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용인했지만 곧 태세를 가다듬고는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집중했다. 또 백신 불평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낳아 팬데믹을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경쟁과 이윤 시스템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모두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낳은 문제임을 강조한 말름의 주장은 완전히 옳다. “코로나와 기후는 작금의 오래된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각자 시공간 스케일을 지닌 채 뒤섞여 있는 두 개의 면



이라는 것이다.”(124쪽) 따라서 “문제의 뿌리를 겨냥[해야 한다.]”(141쪽)

그는 자본주의가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지언정 결코 로마 제국처럼 “자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의식적인 개입의 정치”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의적절한 주장이다. 그 정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사회민주주의와 아나키즘 비판

말름은 사회민주주의를 통렬히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가정 위에서 생명력을 유지한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한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좋은 사회를 향해서 천천히, 상승 계단을 밟아가며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점진주의를 위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161쪽)

기후 위기와 팬데믹의 시대에 이런 비판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집권기에 기후 위기 대처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러기는커녕 국가 경쟁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적 성장에 매진했다.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신물이 난 청년들은 아나키즘에 이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말름은 아나키즘도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아나키즘이 국가를 증오한 나머지 기후 위기나 팬데믹처럼 국가 수준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팬데믹 상황에 놓인 일부 취약 지역들에서 주민들의 상호부조가 꽃핀 것을 찬양하지만, 어떤 경우도 대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조치들은 사실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했을” 과제다.

저자가 이 책에 붙인 원래 부제는 (한국어판에 붙여진) ‘생태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시공산주의’다. 말름은 그린뉴딜 주창자들이 제2차세계대전의 경험을 들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 동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며 러시아혁명 직후의 전시공산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급진 좌파조차 레닌과는 거



토네이도가 파괴한 미국 캔터키주의 한 도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은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리를 두려 하는 세태를 거슬러 레닌과 트로츠키의 정신을 오늘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급진성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그가 얘기하는 레닌주의는 너무 혼란스럽고 심지어 일부 주장들은 자칫 레닌과 트로츠키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악용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해야겠다.

먼저 말름은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혁명의 필요성 자체를 기각한다.

“그런데 어떤 국가를 활용한다 말인가? 소비에트 기반의 노동자 국가가 하룻밤 새에 기적적으로 탄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건 망상과 범죄 모두에 해당한다.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 상대는 자본의 회로에 늘 얽매어 있는 음울한 부르주아 국가일 뿐이다.”

이런 비판에 빠지는 게 말름만은 아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좌파가 비슷한 이유로 “당장 손에 쥔 재료들부터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기후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시한폭탄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해야겠다. 이런 오해는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 때문에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순기능이 더 컸음에도) 증폭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2030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그 결과가 판가름나는 현상이 아니다. 2029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면 피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기후 변화는 어느 순간 임계점(티핑 포인트)를 넘어 급격해지거나 이로 인한 변화들 중 일부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뒤에는 인류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혁명에 성공하

더라도 이미 많이 망가진 지구를 물려받아 그 위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해서 기후 위기를 멈추겠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은 말름이 비판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100년 넘는 역사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그리스 시라자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또 말름 자신이 《화석 자본》에서 보여 줬듯이 화석연료는 자본주의에서 벗겨낼 수 있는 껍질 같은 것이라기보다 그 뼈대라고 할 만하다. 자본주의를 내버려둔 채 뼈를 발라내려 했다가는 자본주의 국가는 모든 발톱과 이빨을 사용해 운동을 분쇄하려 할 것이다.

말름이 우호적으로 인용한 레닌의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바로 이처럼 자본주의를 내버려두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당시에는 전쟁, 홍수, 곡물가격 폭등 등)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국가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글이다.

반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체제의 위기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는 혁명의 시계도 가속된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 위에 겹쳐진 팬데믹 위기와 기후 위기, 지정학적·군사적 긴장 고조는 세계가 지난 50년과 같은 속도로 굴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5년 안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30년을 내다본다면 혁명의 가능성은 필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승리 여부는 결정된 것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혁명적 전략

말름은 투쟁적인 ‘직접행동’으로 국가를 강제하자고 하지만 정말로 국가를 강제할 힘을 어떻게 조직할지는 공백으로 남겨 둔다. 그러다보니 분명한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손에 잡히는 대

로 뭐든지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으로 나아간다. “자본주의 국가가 이 과업에 나서게 하려면, 시민이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선거운동부터 사보타주까지 일체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참여한 엔데 겔렌데 운동 등은 화력발전소를 점거해 가동을 멈추고 정부로 하여금 폐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체제 전체를 바꾸려면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기후 운동은 노동계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은 기후 위기의 주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에 맞설 힘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물론 오늘날 노동계급이 체제 자체에 맞서기는커녕 조직된 노동조합들조차 자신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불황은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체제의 논리와, 이를 반영하는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분업 등이 그런 분출을 통제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당대의 많은 공산적 사회주의자들과 달랐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그런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잠재력이 있음을 발견해 이를 조직하고 구현하려 분투한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윤 창출 자체를 마비시킬 힘이 노동계급에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20세기 이후 벌어진 여러 혁명들에서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이르기까지 노동계급은 대중적 반란이 체제 자체에 맞서는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을 제공했다.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끝낼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이를 실현할 주체를 조직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드는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정선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소홀히 한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지 않고 코호트(집단) 격리하는 일이 늘고 있다. 11월 18일에 이미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34곳, 요양 시설이 22곳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요양병원도 얼마 전 3층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다.

3층 병동의 확산세는 전해 듣기로도 정말 무서운 상황이다. 11월 하순에 1명이었던 확진자가 금세 20~30명으로 늘어났다. 코호트 격리 이후 불과 며칠 만에 3층 환자·간병인 절반 이상과 일부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대부분 70~90대 노인들로 뇌졸중, 치매, 당뇨, 고혈압, 암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환자 5명, 간병인 1명으로 이뤄진 6인실에서 생활한다. 병실뿐 아니라 병상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은 시간문제였다.

정부 지침에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병동을 분리하고, 비확진자 중에서도 밀접 접촉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애초에 좁은 병동에 많은 환자와 간병인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에서 이런 지침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일 뿐이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질 때 호흡기 치료 등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위급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같은 장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일찌감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관찰해야 하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에 있는 확진자가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분류하고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조차 벌써 3~4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며칠 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환자 대부분이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죽음이 나오리라는 것은 볼 뻔한 일이었다.

언론 보도만 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월 24일 대구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한 달 새 154명 확진, 30명 사망. 11월 19일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73명 확진, 6명 사망 등등.



집단 감염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 생활하는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는 노인 환자들을 집단 감염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탁상행정

지난해 말에 전체 코로나 사망자 중 무려 35퍼센트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9~10월 백신 접종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치명률은 4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확진자 10명당 한 명 꼴로 사망하는 것은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사망한 환자들은 병상이 없어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들은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는 상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상을 확충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축소해 주는 효과를 낸다.

이미 지난해 말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공분이 커지며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재택 치료'라는 황당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 집단 감염의 위험을 키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끔찍한 현실이 다소 무디게 느껴지게 됐을 뿐이다.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 의료진과 간병인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환자의 가족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코호트 격리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말했다. "어머니께 염도, 수의도 못 해 드렸다. 화장된 뺨가루만 유족에게 전해졌다.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 이 말처럼 코호트 격리로 인한 요양병원 사망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

의료진·간병인의 고통

의료진은 감염 위험도 감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작할 때는 의료진까지 병동에 가두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의료진의 출퇴근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여러 의료진도 감염이 된다. 가뜰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던 병원에서, 소수 의료진에게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간병인들이 겪는 고통도 심각하다. 간병인의 대부분은 50~60대 중국 동포들이다. 이들은 병실에서 24시간, 일년 내내 거주하며 환자들을 돌본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몇 해 전에 듣기로 이 노동자들의 일당은 8만 원가량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3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얼마 전 한 병원의 간병인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 심각한 상황을 고발했다.

"11월 15일까지 같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28명 중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간병인을 격리 조치도 하지 않고, '확진자가 나와도 자리 옮기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하

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병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코로나 감염의 공포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가 일하는 병원의 2층 병동에서는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을 모두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시켰는데, 이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들은 하루아침에 수년간 일해 온 병원을 떠나야 했다.

코호트 격리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 환자들을 집단 감염과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간병인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확진 환자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송해,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